

# 선원 귀환 최우선... 이 대통령,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 주문

외교역량 동원, 국제사회 협력 지지  
원유·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 당부  
지방투자 확대·재정 우대정책 지속  
포괄임금제 금지·초과근무 수당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가 가진 외교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달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



지난 1일(현지 시간) 인도 뭍바이의 뭍바이 항구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인도 국적 LP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 /AP·뉴스시

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

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하지 마라”면서 “누구 담당인지 모

르겠는데 연장, 야근, 주말 이런 것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초과근무 최고 한도를 언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규정에 대해 “초과근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 데 없이 초과근무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초과근무 한도를 채워 보상받는 관행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문화도 좀 바꿔야 한다. (초과근무) 제한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 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하다”며 김실장에게 “개선책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하정우 부산 출마설에李 “넘어가지 말라”

정청래 대표 “당에서 필요한 인재”  
하 수석 “당분간 휴서 일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을 비롯한 국가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던 중 하 수석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하GPT(하정우+챗GPT)’로 부르며 “하GPT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에 하 수석이 “그러게 말합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하 수석 부산 출마설 때문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부산 북갑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하 수석이 여기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조승래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

민주당 사무총장은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제의하기도 했고, 전날(8일) 정청래 대표도 하 수석에게 출마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에도 하 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서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듣고 “대통령께서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는 농담으로 말씀하셨느냐”면서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하 수석이 국

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책임자라는 것이고,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출마 불허’라고 해석했다. 하 수석의 보궐선거 차출을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하 수석 역시 청와대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정우 수석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모가 먼저 ‘한다, 안 한다’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여기(청와대)서 더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출마 권유는)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은 이런 요청들을 포함해 지역균형발전 등 더 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게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조금 더 남아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일부에서 ‘출마가 확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당의 요청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출마가 결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

## 국힘 공천 갈등 수면위로... 최고위서 충돌

공천 과정 공정성·전략 부재 비판  
최고위원 사퇴 규정 관련 사과도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의 공천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공개 회의에서는 공천을 신청한 최고위원들이 상대 후보 의혹을 제기하고 경선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내용이 공개돼 “당원께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나왔다.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이철우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하면 선거기간 내내 검찰의 기소, 좌파 언론과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기지사 후보 추가 공모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관위는 좀 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무작정 결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신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을 쪼그라뜨렸다”며 “이런 패배주의와 비상식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따위에게 ‘니들은 아예 후보도 내지 마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점성 정책위의장은 당원들을 향해 ‘최고위원 사퇴 후 출마’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을 사과했다. 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천 신청과 동시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고위원회의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했지만, 설마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느냐는 안이한 인식으로 규정을 두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당의 여러 노력이 후보 개인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당을 위해 걸은 분들이라면 지방선거 승리와 당을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홍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및 당직을 맡고 있는 경선 후보자는 불필요한 오후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본인 선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민주당, 대·중기 플라스틱 ‘상생협약’ 추진

납품대금 선제적 조정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비용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 공급 불안으로 화학 기초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대기업인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은 나프타로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근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합성수지 공급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의 선제적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노력, 선급금 지급·유동성 지원 방안 모색, 원재료 수급 문제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할 납기 연장 협조, 납품지연에 따른 페널티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